

‘美관세전쟁’ 비껴간 日… 원엔 환율 2년만에 1000원 근접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100엔당 975.44원까지 올라 원엔 환율 21개월 만에 최고치 엔화 강제 당분간 지속될 듯

엔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 내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이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 때문이다.

엔화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만큼, 원·엔 환율이 2년 만에 ‘100엔당 1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9.67원(1.00%) 오른 100엔당 975.4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2023년 5월 17일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며, 올해 초 기록했던 934.77원과 비교해서는 40.67원(4.35%) 올랐다.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원·엔 환율이 올해 들어 상승을 지속하는 가운데, 타 통화 대비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하락(엔화 가치 상승) 중이다. 올해 초 달러당 156.87엔이었던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에는 달러당 150.60엔까지 내렸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압박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24일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이 동반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일본 총무성은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면서, 일본은행이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라 관측이 빠르게 힘을 얻었다.

일본은행 내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정책 선호) 위원으로 꼽히는 다카타 하지메 정책심의위원은 지난 19일 “실질 금리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완화적인 금융 환경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경제와 물가에 대한) 전망이 실현된다면 한 단계 기어를 올릴 시점”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에서 비교적 안전한 국가라는 관측도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지목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주요국 가운데

대(對)미 투자액이 가장 많고, 미국 내 생산 비중도 큰 일본에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

원·엔 환율이 상승을 지속해 100엔당 1000원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엔화가 10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23년 4월이 마지막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엔화 가치도 점진적이지만 추가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시기 및 국제 매입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엔화 추가 절상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엔화 가치가 절상될 여지는 크다”라고 분석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에 따른 주요 경제권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엔화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추가 긴축 기대 반영 속에 일본은행 당국자의 매파적 영향 반영 등이 소폭 엔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사, 자금조달 완화 조짐… 카드론 금리 인하 ‘고개’

여전채 금리 3년 만에 2%대 안착
카드론 잔액 오름세… 대출은 경계

신용카드사가 취급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스프레드)가 함께 떨어지면서다. 카드사의 대출길 개방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여신전문금융회사채(AA+/3년물) 금리는 연 2.98%다. 전년 동기 대비 0.71%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으로 지난달 25일 기준 국고채 금리와 여전채 스프레드는 전일 대비 각각 4bp(1bp=0.01%p), 3bp씩 떨어졌다.

여전채 금리가 연 2%대에 안착한 것은 약 3년 만이다. 카드사는 채권 발



Chat GPT가 생성한 ‘카드론을 취급 여부를 고민하는 카드사 직원’ 이미지.

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앞으로 카드사의 조달 부담이 완화될 조짐이다.

통상 여전채 금리가 낮아지면 카드론 및 자동차할부 등 카드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금리도 함께 떨어진다. 카

드사가 운용 자금을 3~4개월 전 앞서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는 차주들이 카드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카드업계 또한 카드론 금리 인하 관측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물론 여전채 금리 하락분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각 사별 신용등급 및 자금 포트폴리오에 따라 조달 비용이 상이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이 취급한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연 14.46%다. 전년 동기(연 14.63%) 대비 0.17%p 하락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에게 적용한 평균 금리는 0.18%p 상승하면서 시장 금리 인하 기조에 역행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기

업어음(CB),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여전채 금리만 고려해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여전채 발행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대출길 개방 여부도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건전성 확보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년부터 카드론 잔액이 오름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NH농협카드를 포함한 카드사 9곳의 카드론 합산잔액은 42조 7310억원이다. 전월 대비 3437억원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조 5189억원 가량 급증했다. 여전히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란 분석이다.

한편 중저신용차주대출 여건에 긍정

적인 신호도 등장했다. 대한대출 잔액이 감소하면서다.

지난 1월 카드사 9곳의 카드론 대한대출 잔액은 1조 6111억원이다. 연간 1231억원 감소했다. 카드론 대한대출은 중저신용차주가 상환을 앞두고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게 일반적이다. 카드사가 ‘대출 돌려막기’를 시행하는 취약 차주를 줄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성적표를 보기 전까지 대출 기조를 수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드업계가 올해 인사쇄신을 단행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다. 금융상품 운용에 조심스런 행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에선 건전성에 집중해야 했다면 올해 영업은 미래 점유율 경쟁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선부터 금융상품 취급 확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전국 미분양 주택 7.2만호… 올해 건설사 최대 악재

악성 미분양 2만 2872호 달해
20개 건설사 미수금 약 35.5조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는 등 미분양이 건설 부동산 시장의 최대 악재로 떠올랐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에서 한 숨 돌리고 나니 미분양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2624호로 지난해 12월 대비 2451호(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은 7440호로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미분양은 더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작년 6월에 7만 4000호를 기록한 이후 6만

호 안팎으로 안정되다가 작년 12월에 다시 7만호를 넘기며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대비 1392호(6.5%) 증가해 2013년 11월(2만 2227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대손 반영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기업평가는 “작년 9월 말 기준 유효등급을 보유한 20개 건설사의 미수금(공사미수금+미청구공사)은 약 35조 5000억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2.2% 증가했다”며 “부동산 경기 저하 등에 따른 초기 분양성과 저조와 신규 착공 축소

로 인한 공사수수금 유입 감소 등으로 업계 전반의 운전자본부담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은 또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 비중은 2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수도권 사업장은 프로젝트의 비용 구성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미분양 발생시 지방사업장 대비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2022년부터 본격화된 건설 업황 저하 시기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던 분양 물량들이 오히려 손익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수도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양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1월 말 기준 수도권이 1만 9748호로 전월 대비 2751

호(16.2%)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소폭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비수도권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도권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이 7만호를 넘긴 상황에서 3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 주택시장을 공공 재원을 통해 회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위축된 지방의 수요 심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SGI서울보증 보험사기 근절 위해 전담조직 역량 집중

SGI서울보증은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보험사기 대응 전담조직(SIU)을 신설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출신 전문 조사인력을 SIU팀에 추가 배치하고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90건의 보험사기 의심 건을 적발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SGI서울보증은 인수심사 단계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까지 업무 전 단계에 걸쳐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